

地域社會 開發側面에서 본 原子力發電



薛 東 宣

〈靈光原電 地域住民〉

1.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정든 고향을 떠난 철거정착주민들이다.

향후 발전소건설에 따라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줄 기대했지만 당초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생활기반이 없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양상은 오직 절망뿐이다.

1-1 충분한 공청회 방법

한국전력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지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공청회 방법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편의에 따라 졸속행정으로 추진되었기에 오늘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한다.

1-2 문제의 요인

'79년도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당시 관할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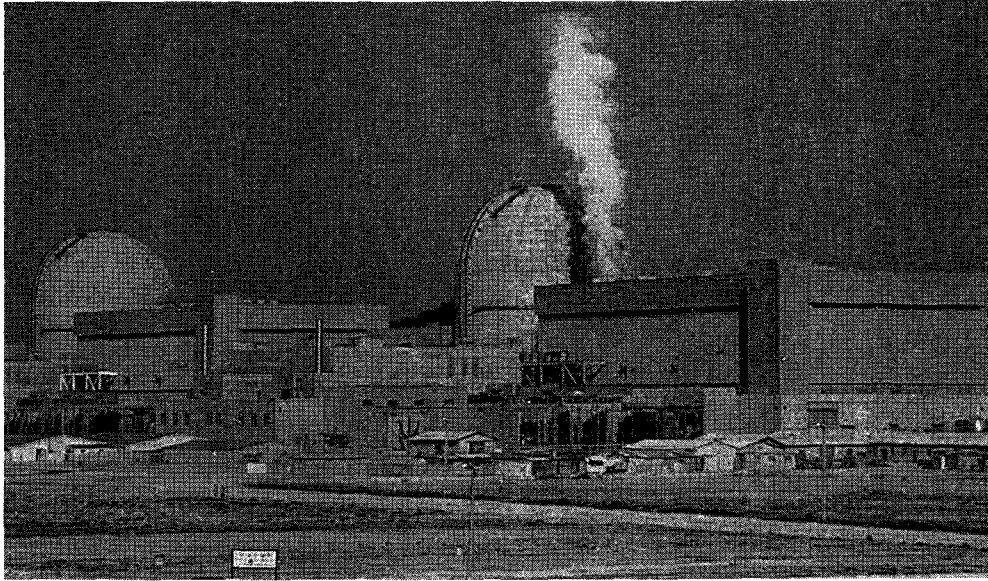
정기관으로부터 향후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문제에 관해서 추후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건설이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0년거치 20년상환 융자지원금에 의하여 약 80동의 주택이 신축되었다.

또한 여산과 양지 두 마을에 각각 1천만원씩 택지조성지원금까지 보조혜택이 주어지므로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착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원전건설기간동안은 다른 생업없이 유일한 생활기반은 월세방 임대료에 의존하여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85년도부터 원전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 후 정부융자주택에 대한 이자와 부금을 농협에 납부하지 못하여 불행하게도 경매처분까지 받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할 불과 5~6년 앞을 예견치 못하고 의형적 행정에만 치우쳐 오늘의 현실적 문제가 도래되었다.

'80년도말에 이르러 원전주변에서 집단적 민원문제가 제기되어 원자력산업 발전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원전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은 날로 확산되었다.

집단적 민원문제는 반원전운동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 생활문제를 해결키 위한 수단이었으나 반원전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투와 선동에 의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부나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더이상 수수방관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89년 6월 16일 제정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원전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민층과 부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계층이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제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첫째, 경제적 생활문제를 미흡한 지원금으로는 장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90년도 상반기부터 이주 희망자에 한해 이주신

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나 '79년 원전건설당시부터 타지에서 이주해온 외지인은 이주에 관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제외시키고 있다.

'79년 원자력건설당시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건설분과 원자력건설의 우려했던 메아리는 외지인이나 지방원주민을 막론하고 부푼꿈과 기대와 장래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이제 이주에 관한 문제를 수용하여 진행하는 이상 외지인이건 원주민이건 선별할것 없이 누구나 이주를 원한다면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업비는 연간 전기매출액 4조원에 대한 0.3%로서 연간 120억정도 주변지역지원금이 출연된다.

120억 지원금을 각 발전소에 따라 분배하게 된 지원금은 영광원전에 약 10억정도가 해당되는데 지원대상지역을 반경 5km로 정하여 해당되는 지역은 모두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10억의 지원금을 가장 살기 어려운 대상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지원하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경 5km 모두 지원사업은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배과정에서 여러가지 역기능 현상만 나타

날 수 있다.

2. 일본 원전정책에 관하여

본인은 지난5월 원전지역주민 일본원전시찰단 대표로서 일본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일본원전주변 주민들의 차분하고 안정속에 평화로운 생활모습을 보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중 원폭피해 당사국으로서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이 크기때문에 반원전운동도 매우 활발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네번째 원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지지로 현재 39기의 원전이 운전중이고 13기가 건설중이며 동시에 3기가 추가건설계획중에 있다.

본인은 일본을 방문 시찰하기전만 해도 원전주변 주민으로서 원자력에 대하여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시찰후는 원자력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하였다.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원자력평화이용협의회의 원전에 대한 홍보 활동이다.

일본은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해증진과 협력으로 원자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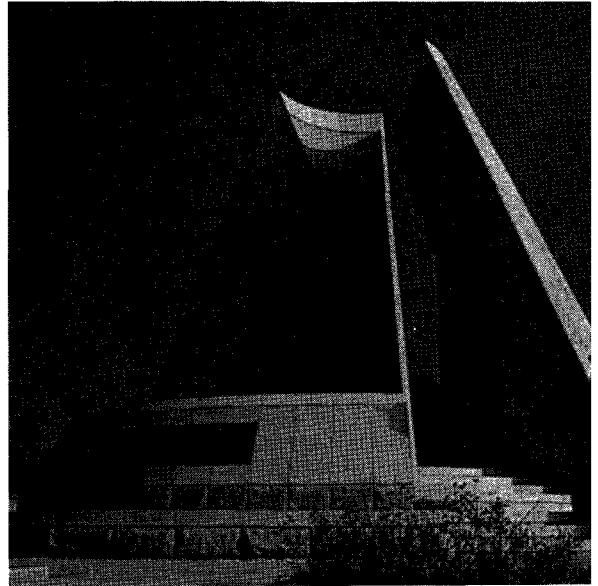
3.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추진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전기에너지다. 그러나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들이 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주변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판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의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관계당국은 원전주변 주민들에게 한덩어리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첫째,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여 전기매출액의 0.3%를 1%로 수정보완하고

둘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일정기간만이라도 전기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셋째, 겨울난방시설까지도 지원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4. 불신감 해소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얻어지는 혜택과 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의 실상을 이해시키는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일부 비판적 국민의 시각은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되고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계몽을 위해 전국각지에 홍보강사를 파견하고 신문이나 잡지, TV방영 등으로 국민의 의문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국민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원자력사업은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